2020년 09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해당사항 없음'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o 프로그램 명 : 바로보는TV 옴부즈맨

o 편성시간

기 존	본방송 매주 일 04:00~04:30(재방송 매주 월00:25~00:55)
변 경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이정훈	9/06	<뉴스특보>, <뉴스1번지>	
김창숙	9/13	<뉴스특보>	
김홍태	9/20	<뉴스특보>	
김창숙	9/27	<뉴스특보>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이정훈	대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15. 11. 26	-
활동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교수	2016. 08. 23	-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답변부서
2020 9/6(일)	이정훈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815광화문 집회와 종교 모임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세를 보도하면서 지역별, 연령별 등 확진자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당국의 관련 대처 방안도 전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 삶에 폭 넓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지만 장기간 진행되면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언론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관련된 정부의 발표나 의료진의 권고안에 대한 불신이나 혼란이 관찰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확진자 수치를 제시하거나 정부의 방안을 소개하는 보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관행적인 안전한 보도 형태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쟁점이나 이슈에 대해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나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상황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자영업자 등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현실과 대책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 개선이나 사태의 안정화에 대한 개개인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보나 대안을 제시하고 부정확한 정보나 주장을 거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나 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 9/13(일)	김창숙	9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안 편성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4차 추경 규모는 7조 중반대가 될 것이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골라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오후 4시 <뉴스특보>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뉴스초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슈들을 짚어 봤는데요. 선별 지원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아직 지급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고,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던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 마련이나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이끌어 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혜안이 필요한	전문가를 섭외해 대담 진행 시 더욱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명확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안인데 구체적인 방안 없이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아쉬웠습니다.	
2020 9/20(일)	김홍태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며칠 전 인천에서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며칠 전 인천에서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치킨 배달 중 음주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가해자가 119 요청에 앞서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유족 측 주장까지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119 구급차가 황급히 달리며, 도로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고, 각종 파편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으며, 달리던 차량들은 운행을 멈췄다고 전하며, 사고를 낸 검은색 벤츠 차량은 중앙선 옆에 떡하니 서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으로 유족의 가슴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시행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막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와 그 예방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멘트가 다시 한 번 필요해 보이며, 깊은 상처를 받은 유족에 대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로와 공감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0 9/27(일)	김창숙	지난주에 연합뉴스TV는 가출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문제를 연속보도로 다루었는데요. 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단순한 사건 리포트에 그치지 않고 기자가 발로 뛰어 얻은 단독보도와 피해자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이 전달되어 심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출 청소년은 성매매 외에도 수많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의 성매매 피해 사례만을 반복적으로 다룬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메시지가 부족했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 역시 아쉬웠습니다.	가출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20. 09. 0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5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태풍 바비의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데다 의협이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높았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이 후 코로나 19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세를 상세히 보도하고 관련 당국의 대처 방안도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4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441명 중 수도권이 전체의 70% 가량인 313명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에서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확진자의 급증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발 집단감염 영향이 컸고 최근 2주 동안 깜깜이 환자 비율이 19.4%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단감염의 확산에 대해 2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달라는 방역당국의 당부도 전했습니다. 은 날 보도에서는 26일 서울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54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지난 16일에서 22일 사이 전체 확진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3.3%, 177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의 누적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30.7%였지만, 전체 사망자 16명 가운데 15명이 해당 연령대에서 나왔고 특히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9.8%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지원반을 확대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고 집합금지명령을 어겼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업체 29곳을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진 보도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도들 간의 감염을 원천 차단할 순 없기 때문에 정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당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이상이고 여전히 종교계 내부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을 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지난 2주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3,936명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19.4%인 764명이고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69.2명으로, 즉시 3단계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3단계 시행 관련 논의 중인데 3단계로 격상되

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10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와 광주시는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 등 강화된 조치 시행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전국 17개 시, 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다음 주에 하루 최대 2,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정부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 3단계에 준하는 방역강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의료체계 붕괴는 물론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로 규정하면서 당분간 의료기관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 출퇴근 이외에는 외출이나 모임을 연기 또는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서는 광복절 도심 집회가 있던 주말 이후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가 급상승하고 방역망에 걸리지 않는 숫자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역학조사 부담이 커짐에 따라 조사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별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확진자가 머물렀던 시설 이용자를 전수검사 하는 식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검사량은 다소 늘 수 있지만, 확진자를 일일이 가려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에서 무더기 확진자와 n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3천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천명의 확진자까지 5달, 2천명까지는 2달, 3천명까지는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 중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도 1,200여명으로 늘게 되면서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치료 병상 가동은 95%로 한계상황에 도달했고 안산과 이천의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이 63%로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고양과 안성에 생활치료센터 2개를 추가로 확보했고 경기도의 공무원에게 향후 2주간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815광화문 집회와 종교 모임 등으로 인한 코로나 19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세를 보도하면서 지역별, 연령별 등 확진자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당국의 관련 대처 방안도 전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 삶에 폭 넓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지만 장기간 진행되면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언론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관련된 정부의 발표나 의료진의 권고안에 대한 불신이나

혼란이 관찰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확진자 수치를 제시하거나 정부의 방안을 소개하는 보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관행적인 안전한 보도 형태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쟁점이나 이슈에 대해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나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상황의 개선이나 사태의 안정화에 대한 개개인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보나 대안을 제시하고 부정확한 정보나 주장을 거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나 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의협의 2차 집단 휴진 사태를 보도하면서 의협과 정부 당국의 갈등 상황을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뉴스1번지>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의까지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대학 병원들은 외래 진료와 신규 환자 입원, 수술 등을 줄이며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휴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장단을 만났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고 전하면서 정부와 의협이 막판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뉴스특보>에서는 전국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닷새째 집단휴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26일부터는 전공의와 전임의뿐 아니라, 개원의로 이뤄진 의협 2차 총파업도 예고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급하지 않은 수술은 미루고 일부 외래 예약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전임의까지 파업에 단계적으로 가세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암환자들까지 수술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집단휴진 기간 문여는 병원'을 소개할 계획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자체에서 보건소 중심의 의료·진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뉴스특보>에서는 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했고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3만2,700여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6% 정도가 사전 휴진 신고를 했고, 엿새째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들은 60% 가량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고 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업 철회를 거부한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무기한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뉴스특보>에서는 동네 의원도 참여하기 시작한 의협의 두 번째 집단휴진이 28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2차 파업은 동네의원의 10%가량이 휴진했고 전공의 집단휴진에는 전공의 60% 가량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형 병원에선 교수급 의료진이 메우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건소 중심의 의료·진료 지원을 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집단휴진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주요 20개 병원 휴진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금고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무기한 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다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에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일단 정부와 의협 모두 대화는 계속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내린 진료 복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 일부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의사협회는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명령 거부 행위를 방조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30개 주요 병원 현장 조사 이후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전공의들의 70%, 전임의의 28% 정도가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에게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협은 전공의 고발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76% 가량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일부 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사직서를 내거나 낼 것을 결의했고 의대생 상당수는 다음 주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정면충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의협이 강행한 두 번째 집단 휴진을 보도하면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동네 의원 등의 집단 휴진 참여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이

취할 법적 그리고 행정적 처벌 내용을 주로 보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의협 집단 휴진 자체에 집중하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경고나 처벌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사안 자체를 의협의 집단이기주의나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의 문제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나 쟁점이 문제인지 그리고 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현재 국내 의료 산업과 정책의 특성상 해당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대결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일반 시청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19 사태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의료 산업이나 의료계가 안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슈를 포함하면서 사회적인 논의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이 이번 사태를 보다 총체적으로 의제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0. 09. 1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59회 – '연합스TV를 말한다'>

9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안 편성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4차 추경 규모는 7조 중반대가 될 것이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골라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오후 4시 <뉴스특보>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민식 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 부위원장은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득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논의했지만, 2차 지원은 피해를 많이 입은 업종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계층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식 전 의원은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히 힘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경이 계속되면서 재원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원은 결국 국민의 빚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되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 부위원장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2차 지원이 신용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업자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현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업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노래방은 되는데 단란주점은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자는 지원 금액 정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현 부위원장은 결국 어떤 업종, 어떤 계층에 지원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계층별 규모가 파악되어야 예산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사회자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가 선별 지원을 수용하는 뜻은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을 향해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갈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식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의 한명이기 때문에 대선주자로서의 독자적인 행보,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이므로 본인의 메시지로 국민에게 전달한 것인데, 이번 경우 세게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권을 잡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울 경우가 생기더라도 결국 본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잠정적인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이 온화하고 문재인 정부와 같이 길을 가는 반면 이재명 지사는 독자적인 행보를 슬슬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정책적인 논의 단계에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의견을 수용했지만, 뒤에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갈 것이라는 말을 붙인 의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 부위원장은 표현이 다소 셌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아쉽다'혹은 '다음에는 전국민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다며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초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슈들을 짚어 봤는데요. 선별 지원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아직 지급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고,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던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 마련이나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이끌어 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혜안이 필요한 사안인데 구체적인 방안

없이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아쉬웠습니다. 9월 5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사고방식과 역사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스가 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가 될 경우 그의 역사 인식이 향후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스가 장관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줄곧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 아베 정권의 노선과 궤를 같이했고, 한국에 각을 세우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회자되는 발언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관한 언급으로, 2013년 안중근 표지석 설치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안중근에 관해서는 범죄자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그동안 전해왔다”면서 표지석이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14년 중국에 안중근기념관이 개관하자 안 의사를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정권의 인식과 차이가 없다고 보도하며, 2018년 유엔 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고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다룬 한국의 사법절차에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들은 대부분 한일관계 경색 국면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서 했던 것이라 그의 입장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만류하거나 일부 정치인의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에 주의를 촉구했던 점에 비춰볼 때 한일관계 관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전했습니다. 9월 6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스가 장관이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의 기본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차기 일본 총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중요한 변수임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분명 뉴스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 관계가 지도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의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논의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가 총리가 될 지와 유력 후보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보도가 다소 많았는데,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선제적인 논의들도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5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디지털교도소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대학생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A씨가 지인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을 요청했다며 A씨 얼굴과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핸드폰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악플과 협박전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학과 학생회는 “A씨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월 7일 오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올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을 요구한 디지털 성범죄정보가 벌써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운영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속차단 요구, 삭제 요구 등 전체 시정요구가 2만 4,688건으로 지난해 전체 2만 5,900건에 근접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전자심의 등으로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심의 대상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을 대신해 개인이 범죄자를 응징하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측에서는 공익적 활동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강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신중한 사안인데,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성범죄혐의자의 신상을 민간사이트에서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의 명백한 위법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피해 사례들을 소개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시청자들이 경각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0. 09. 2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6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소상공인들에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급의 기준과 실질적인 다른 대안 등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집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부는 수도권 등교 재개 여부는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으며, 20일까지 수도권 유·초·중·고교는 원격 수업을 유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인천에서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 방송한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에 따른 내용입니다. 9월 13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기자가 구체적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기자는, 취업준비생 큰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은 PC방을 운영 중이고, 아내는 방문판매원 일을 하고 있다면 이 4인 가족은 최대 4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PC방 등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최대 150만 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50만 원 지원금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되는 특별돌봄지원금을 더한 건데요, 만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까지 더하면 1인당 2만 원씩 총 6만 원을 더 받게 되어서,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4배가 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는 또 다른 맞벌이 가정인데요, 남편은 커피전문점을, 아내는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앞서 1차 때 아내가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받았다면 이번엔 50만 원만 지급되는데요, 이 가족은 특별돌봄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2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은 서점 등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약국 등 전문직종과 복권판매업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지급 업종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9월 12일 오후 6시 [뉴스특보] 에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일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을 매출과 업종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데도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전국에 유통되는 가방의 70%가 생산되는 서울 동대문 남평화시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이 급감하고 외국인 관광객마저 끊기면서, 도매상이 주류인 이곳 상인들 대부분은 고사 직전의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요, 소매상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업 특성상, 마진은 적은데 매출은 지원 기준인 4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상인들은 매출이 아닌 이익이 지원 기준이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 업주들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헌팅포차, 감성주점 같은 업종은 물론, 성격이 비슷한 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빈틈은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피해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꼼꼼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10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일단 반기고는 있습니다만, 피해를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면서, 특히, 지원금도 좋지만, 임대료 감면처럼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서울 종로에서 2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재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저녁 장사까지 접은 상황에서 들려온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는데요, 모두 코로나19 상황을 힘들게 버텼는데, 매출 감소도나 업종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근재 음식점 사장은 국가의 재난지원금 4차 추경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지만,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된다고 하면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말했는데요, 재정 형편상 전체 소상공인 지원이 어렵긴 하지만 아쉽다는 겁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아예 문을 닫아온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일회성 지원금보다 임대료 감면 지원이나 임대료 체불에 따른 명도소송 방지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 자체가 최대 목표가 된 실정인데요, 그런 만큼, 일회성 지원보다 사업 유지에 도움이 될 방안 마련을 바라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시청자들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9월 13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각 가정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런 저런 경우의 수를 들어가며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을 이해하기에 매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9월 12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지원 대상을 매출과 업종 기준으로 구분하였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보도내용도 현실

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보도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꼼꼼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한 마무리 멘트로 좋았으나, 이와 함께 정책의 시간적 재정적 한계 등이 언급되었으면 더 충실했을 것입니다. 9월 10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지원금이 피해를 만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를 전하면서 임대료 감면이나 임대료 체불에 따른 명도소송 방지 같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의 주장도 전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그 기준과 액수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의 모색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명확하게 집은 보도로 상당히 좋아 보였으나, 이전의 지원금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평가나 이후 이러한 형태의 지원금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마무리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9월 14일 오전 5시 뉴스특보에서는 수도권 등교 재개가 교육감 회의 후 결정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교육부는 수도권 등교 재개 여부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일단 기존 방침대로 20일까지 수도권 유·초·중·고교는 원격 수업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라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은 오늘(14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다만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오는 27일까지 대면 수업 금지 상태가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학생과 학부모는 이 길고 지루한 원격수업이 언제 끝날지, 언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결국 수도권 등교재개 여부는 시도 교육감 회의를 통해 결정되게 되었는데요, 20일까지 원격수업은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기한 없이 등교를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다시 등교를 재개하고 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결국 중요한 것은 감염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학교에서는 집단으로 활동하게 되기에 좀 더 진화된 모습의 방역 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9월 11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며칠 전 인천에서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치킨 배달 중 음주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가해자가 119 요청에 앞서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유족 측 주장까지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119 구급차가 황급히 달리며, 도로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고, 각종 파편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으며, 달리던 차량들은 운행을 멈췄다고

전하며, 사고를 낸 검은색 벤츠 차량은 중앙선 옆에 떡하니 서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나섰던 50대 남성이 33살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요, 당시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먹고 나간 마지막 배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해수욕장 인근에서 숙소를 잡고 술을 마신 가해자는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해자 유족 측은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가해자가 119 대신 변호사부터 찾았다는 목격담을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이자 차주였던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해당 사고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시행되었음에도 계속적인 음주음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처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잘 집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난 14일, 결국 가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4일 오후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 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으로 유족의 가슴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시행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막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와 그 예방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멘트가 다시 한 번 필요해 보이며, 깊은 상처를 받은 유족에 대한 위로와 공감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0. 09. 2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6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통신비 지급과 독감 예방 접종 등에 이견을 보이며 설전을 이어가, 4차 추경예산안 처리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 한주였습니다. 이에 9월 2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

는 여야의 입장차를 설명하며 관련 이슈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기자는 여야가 21일 예산 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관건은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대안으로 떠오른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는 무관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전문가가 전국민보다 700만명정도 되는 만성질환자들, 기저질환자들 중심으로 독감백신을 맞추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고 본다며 돈낭비라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려면 행정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22일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민주당은 야당과 최대한 합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거수기처럼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며 통신비 등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0일 오후 4시 <뉴스특보>에서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박민식 전 국회의원과 함께 4차 추경안 처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사회자는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쟁점들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코로나19 국난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22일 이 문제가 꼭 처리되는 적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통신비 지급은 이낙연 신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해서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대상을 조금 축소하는 절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는 백신 무료 접종은 일단 가지고 있는 분량이 2천 9백 50만명 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국민 접종이 불가능하고, 3차 추경에서 이미 1,900만명 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1,050만명 분만 하면 되니까, 여당에서 '전체는 못하고 한 300만명 분을 수용하겠다' 하는 선에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면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통신비는 여당 내에서도 가당치 않은 아이디어라며 반대가 많았던 사안이라며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합치면 거의 1조원 규모의 돈을 지급하는 기준도 불명확하고, 소비 진작 효과도 전혀 없이 1조원의 돈이 그냥 통신사로 가는 것이니, 여당이 이 부분은 흔쾌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개인택시는 되고, 법인택시는 안되는 등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21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4차 추경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회자는 먼저 추경 처리 전망에 대해 질문했는데, 김 교수는 통신비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4차 추경의 핵심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1차 지원 때와는 달리 2차 지원은 방역기준이 강화되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지원이 목적이므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와 백신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회자는 양당이 통신비와 백신 접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돌봄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거나 법인 택시기사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로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원래 통신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힘의 의견이지만, 그게 안되면 통신비를 이용해 무료 백신 접종대상을 늘리거나 돌봄 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거나 소상공인 희망자금 대상자를 법인 택시까지 확대하는 것이 제2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안 처리일을 하루 앞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야 인사들과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각 당의 입장과 중립적인 견해를 함께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김관옥 교수의 말처럼 통신비 지원이냐 무료 백신 접종이냐가 이번 지원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그 문제에 집중되다 보니 전체적인 논의가 그 이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또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드러내면서도 어떤 방안들이 가능할 지 등 발전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보도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비중이 적었는데, 여러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7일 오전 7시 <뉴스특보>에서는 가출 10대 소녀들을 성매매시킨 일당이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인천의 여성안심거리가 끝나는 한 골목에 위치한 모텔촌을 보여주며, 가출 10대 소녀 6명이 밤마다 이곳에 강제로 끌려나와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청소년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성매매를 강요받았는데, 중학교 2학년, 14살짜리도 20만원에 몸을 팔아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매매는 몸이 아픈 날에도 계속됐으며,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성매매 과정에서 강제로 필로폰을 맞는 일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선자들은 가출청소년에게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접근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선배나 지인의 친구들로, 거부하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조직을 추적 끝에 성매매 알선조직을 검거했는데, 가해자들은 역할을 나눠 총책이 즉석 만남 SNS 채팅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했고, 운전기사들이 피해자들을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19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100명이 넘는 성매수자들을 특정해 30여명을 입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과 교사까지 포함된 성매수자들은 피해 청소년이 10대인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들은 하루에 10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걸리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10대 대상 성범죄인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예방 활동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9월 2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일부가 가정환경 문제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이었다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통해 지난해 가출 신고가 접수된 아이들이 2만 4천명, 최근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2만명에 달하는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성매매 등에 노출될 수 있는 14세 이상 청소년의 실종 신고도 연간 1만6천건 이상이라며 정부가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쉼터를 130여곳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율이 40% 미만에 불과하고 쉼터 추가 설립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연합뉴스TV는 가출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문제를 연속보도로 다루었는데요. 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단순한 사건 리포트에 그치지 않고 기자가 발로 뛰어 얻은 단독보도와 피해자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이 전달되어 심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출 청소년은 성매매 외에도 수많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의 성매매 피해 사례만을 반복적으로 다룬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메시지가 부족했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 역시 아쉬웠습니다.

※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0년 09월 06일 04시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0년 09월 13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0년 09월 20일 04시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0년 09월 27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